

# 대학 개방의 전망과 과제

김 종 일

전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대학이 문을 닫는다?

**요**즘 한국의 대학들은 재정신이 아니다. 경쟁력이라는 시대의 話頭가 나라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기업은 대학을 반쯤 죽여 놓기로 作心을 한 것 같다. 이들 눈에 비친 대학은 返品도 안 되는 불량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공해 업소에 불과하다. 교수들은 연구비나 횡령하고 성희롱이나 일삼는 천하의 건달들이다. 그래서 매일 두들겨 댈다. 아무리 맷집 좋은 한국의 대학이라지만 이렇게 맞다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러나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거나 변명할 틈도 없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는 중이다. 교육 개방이라는 태풍이다. 이젠 생존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게다가 대학에 오겠다는 학생의 절대수가 몇 년 안에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제 학교, 그 중에서도 대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하게 망하지 않는 사업'이 더 이상

아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斜陽 産業'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정말 요새는 대학을 인수하겠다는 개인이나 기업을 보기 어렵다. 벌써부터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것 같다. 수십 개의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온다.

기왕 문닫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문제를 좀 더 거론해 보자. 우리나라에는 정규 4년제 대학이 약 150개 정도 있다고 들었다. 나도 이 많은 학교 가운데 한 곳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나라의 '실력'에 견주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인구 2억 수천만의 미국에 3천 개 가량의 대학이 있는데 이 중에 정말 제대로 된 대학은 100 개 안팎이다. 우리나라 대학 150개는 저마다 세계적인 대학이 되겠다고 나선 선수들이다. 이게 다 민족의 자산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마음 든든할 게 없겠지만 현실은 아주 탄판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은 그만두고 지역의 두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함량 미달이다. 학생 수효가 적다는 뜻이 아니다.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자원

조차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지방 群小 대학의 정원을 우선적으로 늘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명분은 교육 개방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대학의 경쟁력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서 온단 말인가? 한국의 대학이 이 지경이 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었겠지만 나는 포드주의(Fordism) 축적 방식을 대학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표준화된 상품을 싼값에 대량으로 생산 판매하는 포드주의 축적 방식은 지식과 정보 중심의 사회에서는 쓸모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도 低質의 규격 교육을 싼값에 공급하는 일에만 힘을 써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포드주의 교육이 대학을 망쳤다면 이 병의 처방은 뻔한 것이 아닌가. 지원 학생수가 줄고 외국의 대학이 들어 오려는 마당에 한국 대학 전체의 구조 개편은 못할 망정 지금도 不實한 학교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앞으로 문달을 학교의 허우대만 키워 놓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대단히 거정스럽다. 이 글의 論旨을 제대로 펼치기도 전에 '과격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나 한국의 대학은 상당수가 문을 좀 닫아야 한다.

## 2. 외국 대학이 몰려 오나?

그동안 한국의 대학은 無風 지대였고 伏地不動의 原形 같은 곳이었다. 이 곳에 어쨌든 개혁의 바람을 불게 만든 것은 냉혹한 시장의 회초리(the whip of the market)였다. 그 중에서도 개방 시나리오가 이 회초리를 더욱 매섭게 하고 있다. 그것이 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이든 또는 별도의 협정과 압력의 결과이든, 이제 대학의 개방은 모두가 하나의 大前提로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문제인 것은 이 나라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그렇듯이 순식간에 흥분하고 순식간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법석을 떠는 모습이다. 사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십년에 가까운 세월이 있었다. 그러나 불이 발등에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의 난치병에 가까운 우리 사회 '고유의' 반응 양식이 여기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우리는 막판에 갑자기 뛰어 들어 정신없이 좌충우돌하다가 밀천마져 날린 엉성한 투기꾼의 몰골로 이 거대한 국제 질서의 지각 변동을 맞고 있다. 이 변화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양식 문제와 직결된다. 하나는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일이고(농업), 또 하나는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일이다(교육). 그런데 농업 개방 문제는 그래도 구체적인 위협이 눈에 보이고 또 그동안 농민에게 지은 죄가 많은 우리 정부라 나름대로의 성의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흉내라도 냈지만 교육 개방에 이르면 정부와 사회의 분위기가 매우 탄판이니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번 기회에 한국의 교육, 그 중에서도 대학과 교수들은 한번 '뜨거운 맛'을 보아야 한다는 식의 논조가 점점 퍼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느낌이 글쓴이의 과민 탓만은 아니리라.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대책이라는 것도 可觀이다. 더욱 가관인 꼴은 그 '대책'이라는 것의 대부분이 진득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만들어 낸 苦惱의 산물이라기보다는 對外 弘報用으로 急造된 엉터리라는 점이다. 사실 요새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대책' 중에는 대학을 더욱 헤어날 수 없는 위기로 몰아 갈지도 모를 해괴망측한 내용도 적지 않게 들어 있다.

개방과 관련된 논의를 보면 거개가 앞날을 悲觀하는 내용이다.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한국의 대학들인지라 희망이 없다는 소리다. 하지만 나는 한국의 대학 협편이 한심스럽기는 해도 그렇게 쉽게 비판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대학이 몰려 올 경우에 국내 대학이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주로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교육 시설, 교수 인력, 학교

재정 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점에 집중된다.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 교육은 아무리 市場 論理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된다고 해도 TV나 자동차와 같은 성격의 상품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美製 자동차나 日製 TV는 바로 소비가 가능한 단순 상품이지만 교육이란 상품은 (그게 상품이라면) 사람의 정신 세계 속에 집어 넣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교육 자체보다는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이 궁극적인 상품이 되는 것이므로 단순한 상품 논리로 견주어서는 곤란하다. 외국의 대학들이 기능적인 교육은 더 잘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능적인 質만이 교육 경쟁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 가장 현실적으로 평가되는 곳이 결국 노동 시장이라고 한다면 '교육 상품'의 독특성은 더욱 뚜렷해진다. 그 어느 노동 시장에서도 '교육 상품'의 기능적인 부분만을 정확하게 가려내어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어느 사회에서든 그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涵養과 가치가 교육의 내용에 당연히 들어 간다. 사람을 쓸 때는 오히려 이 부분에 비중을 두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기능적인 교육을 외국의 대학들이 더 잘 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순한 이유에 근거하여 국내 대학이 배출한 인력이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는 좀 성급한 것이거나 단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물론 세계의 노동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일어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아직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學緣이나 地緣의 영향력이 아직도 상당한 사회이다. 이게 결코 자랑스러운 점은 아니나 현실의 구조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얼마나 훌륭한 외국 대학들이 들어 올지는 모르지만 국내 노동 시장의 이 장벽을 그렇게 험사라 허물지는 못하리라. 逆說적으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간의 여유가 좀 있다는 소리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무슨 樂觀論을 펼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아니 낙관과 비관을 떠나서 나는 우리나라의 대학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외국 대학이 들어 오면 이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리라 믿는다. 또한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에 따라 타격을 받을 학교들은 지금도 한국 사회에 별다른 공헌을 하고 있지 못한 학교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학교들의 도태는 교육 개방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자, 이제는 이야기를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바꾸어 보자. 솔직히 나는 문만 열면 외국 대학이 쏟아져 들어 올 것처럼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의 견해에 쉽게 同感을 하지 못하는 편이다. 문이 열렸다고 과연 외국의 대학들이 몰려 올 것인가? 흔히들 제정이 아주 허약한 私學이 외국 교육 자본의 주된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지적한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교육 자본이 과연 그보다 나은 투자를 할 것인가? 대학을 새로 시작하려면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分校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 분교에서 국내 대학을 압도할 수 있는 교육이 (그것이 기능적인 교육일지라도) 정말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떠오른다. 선진 외국의 대학이라고 죄다 재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세계 제일의 자본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대학들조차 현상 유지에 급급하는 편이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名門 私學들이 오래된 건물을 補修할 돈이 없어 내버려두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 또한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학교와 경쟁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 진출에 힘을 다할 형편이 못된다. 결국 한국의 교육 시장이 제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그렇게 간단히 몰려 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進出說이 나도는 학교들은 대부분 그 나라에서도 그저 그렇고 그런 학교들이다. 이런 학교들이라도 외국어나 商經 분야에는 나름대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때문에 한국의 대학 교육이 일대 혼란에 빠지는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생

각하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국내 대학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터이니까. 내 생각은 그렇다. 아직도 한국의 대학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묵시록적인 ‘최후의 날’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 하기에 달렸다.

한편, 개방이 초래할 사회 문화적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내가 특별히 보탬 것도 없다. 굳이 한마디 하려면 국제화라는 용어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개방과 국제화 타령 속에서 얼치기 교육이 판을 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걸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 3. 개방과 관련한 몇 가지 視角에 대하여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살살이 훑어 보았을 것이므로 방금 말한 대로 내가 별도로 보탬 이야기는 없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들 ‘전문가’ 그룹의 視角이나 觀點에 대한 일종의 ‘시비’라고나 해야 할까. 먼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지금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나 개방의 효과를 논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노골적인 工學的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유능한 엔지니어나 테크니션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엔지니어나 테크니션은 로봇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가치나 철학 같은 케케묵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눈을 부라린다. 그들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훈련을 받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취만 잘 잡으면 훌륭한 교양가가 아닌가 하는 식이다. 최근에 어떤 대학 교수가 교육 시장 개방의 영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런 ‘용감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았다. “교육을 더 이상 품위를 높여주는 악세사리로 보아서

는 안 된다. 상아탑에서 교양과 인격을 논하는 소비재로서의 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이런 소리는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듣기 힘든 것이다. 교육을 상품과 서비스로만 보기 시작한다면 어찌 ‘후진국’의 교육이 살아 남을 수 있겠는가. 또 이들은 한국의 대학이 “쓸데없는” 이론만 가르쳐 왔다고 혹평한다.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대학에 工大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工大라고 해서 이론은 필요 없는가. 현실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론만 “쓸데없는” 이론인가. 다가오는 사회는 지식 사회요 정보 사회라고 한다. 말끝마다 창의성과 종합 능력이 필요하다고 떠들면서 어떻게 이론의 추상성을 비판할 수 있는가. 추상 능력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창의성을 키울 수 있으며 대학이 아니면 어디에서 추상적인 이론을 다룰 것인가. 나는 한국 대학의 문제가 이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얼치기로 가르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이웃 일본만 해도 전공이나 학과의 벽을 넘어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배우는 방향으로 교과 과정을 개편하고 있다고 한다. 이론과 현실을 나누어 생각하는 이분법은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대학의 취약한 경쟁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물론 돈이다. 그런데 요새 아주 회한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돈 타령이 한국의 대학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신만 똑똑히 차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精神一到何事不成派’의 자아 비판은 천박한 이 나라 대중 매체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제법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과연 그런가. 공부 안 하고 전달처럼 지내는 교수들이 없어도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가? 나는 기업이나 언론에서 한국의 대학을 비판(사실은 회롱에 가깝다)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

도 우리 대학의 현실에 엄청난 불만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이들이 대학의 형편이나 제대로 알고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 없는 느낌들이 때가 많다. 한마디로 요즘의 대학 비판은 시체에 매질하는 형국이다. 애정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 대학이 그렇게 ‘개판’이라면 그 책임은 대학이 혼자서 져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부도 기업도 언론도 죄다 共犯이다. 도대체 무얼 보태준 게 있다고 그토록 두들겨 채는가.

교육 개방이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을 곳은 대학이고 교수 사회다. 따라서 그 대책의 최종 책임도 대학이 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의 대학은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변화’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기존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사실 그러한 징조가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하니 걱정이다. 제도와 구조를 닦치는 대로 바꾼다고 개혁은 아니다.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는 왜 생겼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야 최선의 길인지 진지한 고민이 앞서야 할 것 아닌가. 선진국에서 시행한다고 다 좋은 제도도 아니고 또 유행과 時流에 밀려서 둘러서도 안 된다. 획일적인 제도를 학교와 학문의 특성도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교수평가제만 해도 그렇다. 모든 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강의도 잘하고 연구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超人이 되어야 하는가. 이 나라의 언론이 한국 교수들의 ‘무능’과 ‘게으름’을 지적할 때 단골로 사용하는 메뉴, 즉 교수들이 뽐낼 권 없고 일년에 논문 한 편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석에서 나온 소리거나 惡意에 찬 왜곡일 뿐이다.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는 자연과학 분야가 아니라면 일년에 몇 편의 논문을 쓰는 사람이야말로 이상한 것이고 책을 함부로 써대는 것도 좋은 버릇이 아니다. “Publish or perish!”라는 金言이 지배하는 미국 학계보다는 思辨을 중시하는 유럽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론이 나오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교수들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는 일에 인

색한 사회는 세계적인 대학을 가질 자격이 없다. 나는 학문과 관련없는 일에 바쁜 교수들이 대학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교수들을 연구실에 온종일 가두어 두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연구실을 지키든 집에서 온거를 하든 그 형식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교수들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그 죄를 빙자해서 대학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은 참다운 개혁과 거리가 먼 것이다.

#### 4. 우리도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교육 시장 개방을 우리도 능동적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내 대학의 외국 진출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교육이 상품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수입에 대한 걱정만 하지 말고 수출에 대한 희망도 가지자는 이야기다. 아예 공격적 방어니 방어적 공격이니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우리 교육을 ‘수출’하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육을 자동차나 TV와 같은 성격의 상품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다. 사실 나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와 관계된 글을 『大學教育』에 이미 쓴 바가 있는데 지금의 생각도 그 때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그 당시와 견주어서 교육 시장의 개방이 매우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외국에 진출하려는 몇몇 대학의 움직임이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다. 외국 어디에 진출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자기 학교의 학생이나 국내 학생들의 외국 연수의 연장이라는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의 대학들이 재정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 진출 러시 현상은 당장 일어나지도 않

겠지만 지금은 나가겠다고 설치는 것보다는 內實을 알차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개별 학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챙겨보면 좋겠다. 예를 들어 관료주의에 찌든 학교 행정을 교수와 학생을 위해 온전히 복무하는 행정으로 철저히 전환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며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정부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른바 규제 완화 또는 脫規制(deregulation)라는 작업이다. 그런데 대학의 행정이야말로 이 脫規制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지금과 같은 학교 행정을 가지고는 외국 진출은커녕 자기 방어조차 힘들어 올 것은 自明한 노릇이다.

몇 년 전에 내가 쓴 글에서 나는 한국의 대학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과 분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는데 지금도 그 결론은 유효하다고 믿는다.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우선 韓人 교포가 밀집한 지역이다. 그동안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의 개방이 더욱 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대상 지역은 아주 넓어진 셈이다. 옛 소련의 중앙 아시아 지역과 중국 연변이 적격일 터이다. 실제로 연변에는 최근 在美 교포의 자본과 인력으로 과학기술대학이 문을 열었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인근에서 名門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학교가 있다면 어정쩡한 미국 대학을 상대로 협력을 시도하는 따위보다는 한인 교포가 밀집한 로스앤젤레스나 뉴욕과 같은 도시에 한국학 센터를 정성들여 세워 볼 일이다. 다음으로 유력한 후보 지역은 東南亞나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다. 이들 지역에는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기술이나 농업 분야에 特化할 수 있는 대학이 진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느 지역 무슨 분야에 진출하든지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면밀한 시장 조사와 잠재 수요의 파악이다. 아울러 진출의 목적도 분명해야 한다. 목적이 분명치 않을 때는 그만두는 것이 당

연하다. 이것은 무슨 부동산 투기처럼 한 밀천 잡아 놓는 일이 아니다.

## 5. 글을 마치며

교육 시장이 열린다고 한국의 대학들이 곧 풍비박산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氣高萬丈할 형편도 못된다. 한국의 대학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다. 우선 이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언론과 기업에서 떠드는 것과는 별개이다. 담담하게 도태되는 학교를 지켜보자. 교육 개방이 아니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문 닫을 학교를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만들어 놓았다. 살아 남으려면 '세계적'인 학교가 되겠다는 황당무계한 구호부터 견어치워야 한다. 實事求是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개방이 하나의 계기가 되긴 하였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과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도시 국가의 대학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어떻게 선진국 진입 云云할 수 있는가. 개방을 앞두고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논하면서 나오는 수많은 문제의 대부분이 이 나라 歷代 정부의 책임이라고 나는 늘 생각한다. 정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교육 정책이 어디 있으며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대학이 어디 있었던가. 도와주지는 않고 쓸데없는 간섭만 해온 정부가 대학에만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는가. 기업과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비판은 거개가 파괴적이다. 거기야말로 입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진정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매질만 할 게 아니다. 꼼꼼 생각해 보라. ■

김종일/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사회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형성과 공장체제의 변화』, 『한국 사회복지의 흐름과 논리』 등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